

[종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치러진 29일에도 옛 전남도청 분향소에는 참배객들이 줄을 이었다. 분향소는 31일까지 조문을 받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온 나라 눈물바다 '뜨거운 추모'

盧 국민장 7일간의 기록

“우리가 바보라고 불러도 기꺼이 바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요, 아아, 노무현 당신!”

지난 29일부터 7일간 진행된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은 서거를 애도하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숱한 기록을 남겼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봉하마을을 비롯해 전국 300여곳에 마련된 분향소에 432만 명이 다녀갔다.

지역별 공식 조문객 수는 경기도지역 78만 2천42명, 서울역 분향소를 비롯한 서울 분향소 68만3천46명, 인천 24만6천465명, 광주·전남 22만1천608명 등이다.

노 전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옛 전남도청

봉하마을 100만명...전국 300여곳 500여만명 애도

하루평균 쌀 1만kg·김치 300kg·생수 10만개 소요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은 28일 현재 13만명으로, 사람들의 간격을 1인당 1m로 잡으면 무려 130km에 달한다. 이는 광주에서 전주까지 거리다.

추모기간 동안 전남 옛 전남도청 일원에 걸린 노란 만장 띠는 6천여개에 달했으며, 분향소에 놓여진 국화는 3천송이였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은 조문객은 무려 100

만명을 넘었다. 매일 15만명 이상의 조문객이 봉하 마을회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영정에 헌화했다.

조문객 수는 그동안 최대 조문객수(200만명)로 알려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올해 초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 명동성당을 찾은 40여만명의 조문객을 훌쩍 뛰어 넘는 것이다.

봉하마을 분향소 노 전 대통령 영정 앞에

헌화된 국화꽃은 모두 20여만 송이가 사용됐다.

그러나 조문객이 가져온 국화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준비한 꽃 등을 합치면 50만 송이 이상이 영정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만장도 1천500여개가 사용됐다.

국민적 애도 열기를 반영하듯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을 준비하는 장의위원회도 사상 최대인 1천383명으로 구성됐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조문객들을 위한 최고급 국밥 재료로 하루 평균 쌀 1만kg과 쇠고기 800kg, 김치 300kg 이상 등을 사용됐다. 또 하루 평균 빵 5만개, 우유 5만개, 생수 10만개 등이 쓰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설

국민장에 나타난 '추모 민심' 直視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다. 1주일 간의 국민장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추모행렬에 동참했고, 국민장이 거행된 29일에도 열렬적응은 수 십만 명이 몰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지켜봤다.

사상 최대 규모인 조문객의 추모 열기는 '바보 노무현' 신드롬을 낳을 정도로 뜨겁고 엄숙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추모 물결이 단순히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슬픔만을 표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추모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직시(直視)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경제난으로 서민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역·계층 간 양극화 심화는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립과 갈등을 통합과 화해로 승화해야 한

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당부도 이런 뜻일 것이다. 하지만, 통합과 화해를 말하기 전에 정부의 각성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추모 민심이 ‘이명박식 국정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불통과 배제, 독선으로 일관해 온 국정 스타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까닭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의 자성과 뉘그러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은 추모 민의를 어떻게 어루만질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여든 아흔 자성하지 않으면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은 과거에 얽매일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뛰어날 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선진사회로 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포괄 감사’ 위헌...지자체 감사 내실 기할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포괄적 사전감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전합동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자율과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정부의 합동감사가 버거운 게 사실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몇 년부터 감사준비에 매달렸다. 또한 감사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탓에 고유업무에 소홀하기 쉽다. 중앙정부의 ‘지방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이 같은 폐단

은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지자체 사무 중 약 88%가 자치사무인 만큼 중앙부처의 간섭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 자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가 대두됐다. 이번 판결이 자칫 심각한 감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감독권이 사실상 지자체로 넘어온 만큼 업무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공무원들의 복직에 대한 불평 불만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같은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내실감사는 시급하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에 앞서 필요한 건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다.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자율은 공허할 뿐이다.

盧 전대통령 공동장의위원장 弔辭(요약)

“생전의 짐 훌훌 털고 이젠 편히 쉬시길”

한승수 총리

오늘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떠나시는 길을 배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님과 마지막 이별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고 노 전 대통령님, 돌아보시면 대통령님의 일생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의 타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삶이었습니다. 민중투사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 국민과 함께하는 서민대통령이 되 고자 하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님, 고인께서는 ‘대통령직을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촌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던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우리 국민은 평생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입지전적 길을 걸으려온 대통령님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뒤에 남은 우리는 고인께서 그토록 열망하시던 화합과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고 세계 속에 품격 있는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다시 꽃피우게 해 주소서”

한명숙 前 총리

노무현 대통령님, 얼마나 긴 고뇌의 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자전거 뒤에 태우고 봉하의 눈두렁을 달리셨던, 그 어여쁜 손녀들을 두고 떠나셨습니까? 때인은 시대의 고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새벽녘 선연한 그 외로운 길 홀로 가셨습니까?

유난히 푸르던 오월의 그날, ‘원칙과 상식’ ‘개혁과 통합’의 한걸음 달려온 남이 가시던 날, 우리들의 갈망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님의 자취를 따라, 님의 꿈을 따라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님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생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본연로 반목하고 있는 우리를 화해와 통합으로 이끄시고 대결로 치닫고 있는 민족 간의 갈등을 평화로 이끌 어주소시오.

그리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꽃피우게 해주십시오. 언젠가 말씀 하셨듯이,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또 다시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더는 혼자 힘들어 하시는 일이 없기를, 더는 혼자 그 무거운 짐 안고 가시는 길이 없기를 빌고 또 빌니다.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 이승에서의 모든 것을 잊으시고, 저 높은 하늘로 훨훨 날아가십시오.

빛日만평

- 김종두

힘들때면 꼭 한번씩 찾아 빌게요

장지·안장방식·비문 미정

영결식 이후 남은 절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29일 끝났지만 장지 안장과 비석 건립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이날 밤 늦게 봉화산 정토원 법당에 임시 안치된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49개 이후 장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따라서 유족 등이 장지를 결정해야 한다. 권양숙 여사는 지난 26일 오전 봉하마을 사저 뒤 편 야산을 둘러봤다. 장지로 적합하지 않아보기 위한 것. 봉화산도 장지 후보로 거론됐지만 봉화산은 부지를 사들여야 할 뿐 아니라 바위산이라 평평한 곳이 많지 않다. 선영은 마을 일구 인근의 나지막한 야산에 있으며 양자 바르고 시야도 확 트여 전망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사저와 가까운 곳에 묻히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유족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골 안장방식도 유족이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봉분 없는 평평한 무덤인 평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수목장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나이가 관심을 끄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유서에 따른 비석 건립 문제. 일단 유족 등은 비석 설립을 위한 ‘아주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유충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았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지낸 황지우 시인을 비문 완성 최종 책임자로 정했다. 황 시인은 이날 “누군가 맡아서 쓰기보다는 시민들이 가슴으로 적은 절절한 어구 중 비문에 쓰기 적합한 것을 찾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지경기자 jkpark@

‘에버랜드 CB’ 삼성 이건희 前회장 무죄

에버랜드의 지분회득을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를 위해 이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에버랜드 CB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CB의 인수청약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CB 저가 발행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웅씨 등 자녀가 대량 인수, 최대지분을 확보

토록 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별경제범죄자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 허태학, 박노빈씨에 대해서도 이날 6대5의 다수의견에 따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기업 지배권을 넘기려고 CB를 발행한 데 대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의 경영권 승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北 해외 금융계좌 동결 검토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이번 사태 발생 후 3차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해외 금융계좌 동결 등 대북 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P5+2 회의는 지난 26일 2차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집한 뒤, 미·일이 중심이 돼 1차 초안을 마련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에 2006년 10월 제

택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명시된 조치들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유엔 관계자들은 밝혔다.

다한 기존 결의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해 금수 무기 품목을 대량상당무기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결의안 1718호에는 탱크, 헬리콥터, 미사일 시스템 등 중무기 거래를 금지했을 뿐 봉화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초안에는 북한의 해외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濤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제 1부 2200-641	체육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제 2부 2200-62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